

접 수	의정종합지원 - (20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한미 방위비분담금 청문회 개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4년 2월 일

청 원 인

성 명 : 문 규 현 (인) 외 8 인(법인) 별지 서명자 1,933명

주 소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47 2층

전화번호 : 02-712-8443 (휴대전화 : 010-3297-0568)

소 개 의 원 : 정 청 래 (인) 외 9 인

					의 장
주무관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47 2층		
	성명 : 문 규 현		
건명	한미 방위비분담금 청문회 개최 청원		
소개년월일	2014. 2. 11.		
<p><소개의견>:</p> <p>한미양국 정부가 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통해 ▲2014년 9200억원 ▲배정 단계 사전조율 강화 등 ‘제도개선’ ▲협정기간 5년 등에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정부가 공언한 방위비분담금 감액과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방지대책 마련에 실패한 것입니다.</p> <p>이와 관련하여 우리 국회는 2007년 4월 7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 시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은 별개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예산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정부는 향후 미측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0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7차 협정 비준동의시의 부대의견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했습니다. 2014년 예산안 심사에서도 “정부는 제9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내용에 분담금 미사용액의 우선집행 및 차년도 예산편성시 미사용액을 공제하는 방안이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p> <p>그러나 이번 협상에서도 국회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당국은 방위비분담금 축적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감춰오다가 뒤늦게 확인했지만, 이를 미국정부가 얻지 않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p> <p>방위비분담금의 불법 부당한 전용 등으로 인해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국가의 주권과 국회의 권위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p> <p>청원인이 이 같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청원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당연한 권리이자 지극히 정당한 요구입니다.</p> <p>이에 청원의 소개의원들은 청원인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청문회 개최 청원」이 수용되어 방위비 분담금의 불법 부당한 운용이 시정되기를 바랍니다.</p>			

소 개 의 원

정 청 래 인

청 원 서

청원 제목 : 한미 방위비분담금 청문회 개최 청원

청원 취지 : 한미당국이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협상을 통해 협정 기간을 5년으로 하고, 협정액은 2014년도 92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전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미당국이 방위비분담금 집행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핵심 사항인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 방지장치 마련에 실패했고, 제도개선 사항들도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 것입니다.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돌려쓰는 것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 협정 및 국가재정법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또한, 국회의 여러 차례에 걸친 시정요구를 무시한 것입니다.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에 대해 한미간 양해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양해라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군기지이전비용 대부분을 우리 국민 혈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위해 방위비분담금을 2002년부터 빼돌려 1조원 넘게 축적하고 이 돈으로 돈놀이를 하여 최소 3천억원이 넘는 이자소득을 얻었습니다. 한미당국은 이런 사실을 줄곧 숨겨오다가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자 이제 와서는 주한미군 금융업무를 대행하는 커뮤니티 뱅크가 이자를 수취했다는 제2의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한미당국은 또한 납세문제로 이자소득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가 국회법 제65조 ①항에 의거하여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과 전용, 불법적 이자소득 등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 별첨

청원인

- 이 름 :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주 소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47 2층
- 전 화 : 02-712-8443 / 010-3297-0568(대리 :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청 원 내 용

1.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돌려쓰는 것은 불법입니다.

1)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위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LPP협정 개정 시 새로이 포함된 미2사단 주력 부대인 동두천의 캠프 캐슬, 캠프 케이시, 캠프 호비, 의정부의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스텐리, 캠프 잭슨(강조 필자)의 대체시설자금지원은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LPP 개정협정 제1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가 재정인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미2사단 이전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LPP개정협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2)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위반

LPP협상 초기에 미측은 LPP사업과 방위비분담금의 연계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지난 ‘01년의 SMA 협상시, 한측에서 LPP 지원금을 방위비분담금의 독립항목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미측은 ‘LPP는 한시적 사업이므로 별도의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거부한 바 있다”¹⁾는 기록이 이를 입증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SMA 비준시 국회가 방위비분담금의 총액과 사업항목이 명시된 SMA를 동의한 것이므로, 비록 방위비분담금 사용의 주체가 미국일지라도 한국의 동의와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내역을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이러한 분담금 집행행위는 SMA 위반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²⁾면서 방위비분담금의 목적외(LPP사용) 사용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동의와 승인”이라 함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는 정부의 ‘양해’가 아니라 국회의 동의와 승인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처럼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은

1) 이석중(육군 대령). <방위비 분담 협상방안>. 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 2004.

2)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예산안 분석 IV』, 2008.10, 212쪽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위반입니다.

<표 1>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LPP협정 개정사항³⁾

구분	반 환 기 지	반 환 연도		대체시설 자금 지원
		현행 ⁴⁾	개정안 ⁵⁾	
서울	택시 에넥스	'02	'03	불필요
	캠프 킴	'05	'08	대한민국
	캠프 그레이	'06	'06	미국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06	'06	미국
	캠프 에세이온	'10	'08	미국
	캠프 홀링워터	'10	'05	대한민국
	캠프 카일	'07	'08	미국
	캠프 시어즈	'11	'06	미국
파주	캠프 하우스	'06	'05	미국
	캠프 스탠턴	'07	'05	미국
	캠프 에드워즈	'07	'05	미국
	캠프 게리오웬	'08	'05	미국
	캠프 자이언트	'11	'05	미국
	캠프 그리브스	'11	'05	미국
동두천	H220	'08	'08	대한민국
	캠프 님블	'11	'08	대한민국
오산	오산공군(베타사우스)	'02.10	'03	불요
	오산공군(알파사이트)	'08	'08	미국
김포	김포 우편시설	'05	'05	미국
하남	캠프 콜번	'08	'07	미국
원주	캠프 이글	'11	'08	미국
	캠프 룡	'11	08	미국
인천	캠프 마켓	'08	'08	대한민국
춘천	캠프 페이지	'11	'05	대한민국
포항	주한미해군사령부포항과전대	'11	'11	미국
대구	캠프워커(H-805)	'07	'06	대한민국
부산	캠프 하야리아	'11	'05목표	불필요
	부산 DRMO	'05년 6월	'05	대한민국
동두천 ⁶⁾	캠프 캐슬		'06	미국
	캠프 케이시		양국의 지도부간 합의하에 결정	미국
	캠프 호비			미국
의정부 ⁷⁾	캠프 레드클라우드			미국
	캠프 스탠리			미국
	캠프 잭슨		'08	미국

3) 「2002년3월29일서명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관한개정협정비준동의안검토보고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수석전문위원, 2004. 11, 14쪽.

4) 2002년 LPP협정(필자 주)

5) 2004년 LPP개정협정(필자 주)

6) 2004년 LPP개정협정에 새로 포함된 동두천의 미2사단 이전대상 기지(필자 주)

7) 2004년 LPP개정협정에 새로 포함된 의정부의 미2사단 이전대상 기지(필자 주)

3) 국가재정법 위반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를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돌려쓰는 것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제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어긴 불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방위비분담금 예산은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프로그램)의 단위사업 예산에 속한다. 그런데 미 2사단 이전비용은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의 예산에 속한다. 그러므로 ‘방위비분담금’을 ‘미 2사단이전’에 사용하는 것은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예산 프로그램을 넘어선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는 예산 집행.”⁸⁾이라고 밝힘으로써 방위비분담금의 LPP 사업 사용이 국가재정법 제45조 위반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 군사건설비 예산을 매년 편성한 대로 지출하지 않고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쓰기 위해 따로 빼내 은행에 예치해 놓은 것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그 연도에 지출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 내에 있어서의 세입에 의해 조달되어야 하고, 그 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가 다른 연도에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⁹⁾입니다.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가 2002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1조1,193억원이 불법 축적되었고, 2013년 8월 현재 남아있는 방위비분담금 전용액이 7100억원입니다. 이는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되지 않을 경비를 예산에 책정하였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 제3조 위반입니다.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되지 않을 사업비를 그 해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재정 압박이 초래된 것입니다.

이 같은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은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의 국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제16조 4항의 공개성의 원칙¹⁰⁾도 위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위비 분담금의 불법적 전용을 국민 몰래 미국에 ‘양해’해 주었고 이 사실을 국회와 국민에게 숨겨왔으며 마치 주한미군이 군사건설비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국회에 결산을 보고해왔기 때문입니다.

4) 국회법 유린

8)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예산안 분석 IV』, 2008.10, 212쪽

9) 신해룡, 『예산정책론』, 세명서관, 2005, 23쪽

10) “예산은 국민과 국회에 공개되지 않으면 안된다...또한 공개는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의 모든 단계에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재정을 감독 통제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신해룡, 『예산정책론』, 세명서관, 2005, 16쪽)

국회는 7차(2007~2008년 적용)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 심사 때 “방위비분담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협정)은 별개의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예산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정부는 향후 미측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08년 10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7차 협정 비준동의시의 부대의견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2014년 예산안 심사에서도 “정부는 제9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내용에 분담금 미사용액의 우선집행 및 차년도 예산편성시 미사용액을 공제하는 방안이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서도 국회의 요구를 완전히 묵살하고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계속 허용하였고 미사용액 우선집행 등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회 의결을 완전히 묵살한 것이자 국회법 84조 2항에서 규정한 국회의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¹¹⁾

5) 헌법 위반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결산을 국회에 허위 보고한 것, 그리고 주한미군이 군사건설비를 미2사단이전 비용으로 쓰기 위해 따로 은행에 예치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사실을 감추고 방위비 분담금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헌법 제54조 1항)을 유린한 불법입니다.

6)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배

방위비 분담금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규정을 어기고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를 지원하는 명분은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2사단 이전은 그 목적이 한국의 안보를 지원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를 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11) 제16대 국회 개정국회법은 “결산심사의 형식성을 극복하고 국회결산심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하나로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 국회가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처리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회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권을 신설하였다.”(국회사무처, 『국회법 해설』, 2004, 313쪽)

7) 요구자 비용부담 원칙 위반

방위비 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은 기지이전을 요구한 측이 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LPP협정과 용산협정의 성립 근거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한미SOFA에 따르면 미군기지 이전비용은 미군의 운영유지비에 속하고 당연히 미국이 부담해야 할 사항이며 한국은 다만 시설과 구역의 제공 책임만을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부지제공 이외에 미군의 운영유지비(이전비용)를 LPP협정과 용산협정을 통해서 부담키로 한 것은 어디까지나 이전을 요구한 측이 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은 이러한 원칙이 한낱 약소국에 비용을 전가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LPP협정과 용산협정이 한국민을 기만한 협정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됩니다.

2.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에 대한 한미 간 양해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상희 전 국방장관은 2008년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에 대해서 “2000년부터 이미 한미 양국 정부가 양해했던 사항으로 그대로 가야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10월 31일, “분담금 사용 용도는 지난 2002년 양국 국방 당국끼리 합의가 있었다”며 “특히 미국은 2004년 방위비 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에 전용할 것이라고 했고, 한국 관계부처들도 공식적으로 합의해 준 바 있다”¹²⁾고 주장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2009년 2월, <국회 외통부 보좌관 대상 설명자료>에서 “2007년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정부는 미측과 함께 이 문제를 진지하게 재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분담금의 LPP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기존의 결론을 재확인하였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5쪽에서 인용한 “지난 ‘01년의 SMA 협상시, 한측에서 LPP 지원금을 방위비분담금의 독립항목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미측은 ‘LPP는 한시적 사업이므로 별도의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거부한 바 있다”는 기록은 이른바 ‘2000년의 양해’ 주장과는 모순되는 내용으로, 그런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케 합니다. 또한 2002년의 “양국 국방 당국 간 합의” 주장에 대한 평통사의 정보공개청

12)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창간 58주년 특별 인터뷰, 2008. 10. 31.

구에 대하여 외교부는 “2000년 LPP 사업 구상 설명시 미측은 자체 예산과 함께 방위비분담금을 동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우리측에 제안하였고 우리측은 이를 양해하여 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 “2004년 합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2003-4년 LPP 협정 개정 협상 당시 방위비분담금의 LPP 사업 사용에 대한 우리측의 양해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희 전 국방장관도 2008년 11월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한미 간 양해가 “문서로 작성되지는 않았”.¹³⁾ 다고 실토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답변은 한미간 양해 또는 합의라는 것이 한결같이 조약 체결권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한 문서에 의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한미당국이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전용하기로 합의했다면 그것은 용산협정 및 LPP협정과 별도로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추가로 안기는 문제이자 LPP개정협정의 핵심 내용을 대체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 실체도 분명하지 않은 정부 간 합의라는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고, 최소한 LPP 개정협정의 위상 및 법적 형식과 동일한 수준인 한미 간 정식 협정 체결과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이런 중대한 사실을 2004년 LPP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과정에서 국회에 정식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미 간의 합의 또는 양해는 LPP 개정협정을 대체하는 법적 효력이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양해’ 또는 ‘합의’해준다고 해서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축적과 미2사단 이전비용 전용의 불법성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방위비분담금 전용 등으로 미군기지이전비용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하게 됩니다.

평통사는 2009년 2월 2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미국은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7억5천만 달러만 부담할 것이라는 미 의회조사국(CRS)의 2008년 10월 보고서를 주요 근거로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미 간 기지이전비용 분담 비율이 94.2%(15조6928억원) : 5.8%(9750억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¹⁴⁾

13) 제278회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5호, 2008. 11. 21., 52~53쪽.

14) 유영재,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문제점과 청문회의 필요성”,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에 관한 공청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09. 2. 24, 71~73쪽.

<표 2> 한미양국의 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

<한미양국의 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

항 목	한국정부 주장	부담국	실제부담 예상액	부담액(비율)
건설비	7조 5천억원	미국	9,750억원	9,750억원 (5.8%)
		한국	방위비분담금 + 민간투자 임대주택 건설비 = 6조 5,250억원	15조 6,928억원 (94.2%)
	5조 8천억원		5조 8천억원	
부지매입비	1조 105억원	한국	1조 105억원	
평택지원비 환경치유비 SOC	2조 3,573억원		2조 3,573억원	

그런데 정보공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2011년 9월 공개한 미국 비밀문서에 따르면 “한국이 이전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2일 작성된 미 대사관의 3급비밀 전문에서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 대사는 “한국의 부담분은 전체 비용의 93%”라고 추산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이 차이는 한국의 계산 방식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주는) 방위비분담금 전용분과 민자투자(BTL) 부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¹⁵⁾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2013년 7월 30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LPP)에 따른 미국 부담 비용은 8억8460달러로 추산된다”면서 “나머지 비용은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거나 한국 정부에서 직접 부담할 것”¹⁶⁾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흐름은 한국이 미군기지이전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정부는 2004년 기지이전협상과 협정 체결과정에서 요구자 부담원칙에 따라 용산미군기지이전비용은 한국이,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여, 한국과 미국이 기지이전비용을 절반씩 부담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이런 주장을 믿고 기지이전협정을 비준 동의해 주었습니다.

정부는 미측이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사실을 밝힐 때까지 이를 숨

15) <프레시안> 2011. 9. 28

16) <민중의소리> 2013. 8. 21

겨왔습니다. 위의 비밀 전문에서 버시바우 대사는 “국방부가 심판의 날(day of reckoning)을 계속 미루고 있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정부는 자신들이 숨겨오던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사실이 폭로되자 국회와 국민을 속이면서 국가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끼친 점을 반성하고 사죄하기는 커녕 후안무치하게도 한미당국이 이를 오래 전부터 양해해왔다고 강변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도 한국이 미군기지이전비용을 모두 얼마나 부담하는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4. 미국은 우리 국민 혈세로 최소 3천억원의 이자소득을 얻었습니다.

1) 그 동안 부인하던 이자소득 인정

주한미군이 축적한 방위비분담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줄곧 부인하던 한미당국이 처음으로 관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끈질기게 정부, 국회, 법원, 언론 등을 상대로 미국이 십수년 동안 우리 국민 혈세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축적하고 이자소득까지 올리고 있다고 주장해온 것이 사실로 입증된 것입니다.

평통사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입수한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울지점의 커뮤니티 뱅크와의 금융거래 자료는 미국이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돈놀이를 하여 2006~2007년 2년간 566억원의 이자소득을 얻은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¹⁷⁾ 이를 근거로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을 축적하기 시작한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이자소득은 최소 3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2) 이자소득은 영리행위 금지한 한미SOFA 위반

주한미군사령부와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에서 돈을 빼돌려 축적하고 이를 부동산 펀드 등에 투자하여 이자소득을 얻은 것은 명백한 영리행위입니다. 주한미군의 영리 활동은 ‘한미SOFA의 정신에 위배되는 활동의 금지’를 규정한 한미SOFA 제7조(접수국 법령의 존중)¹⁸⁾에 위배됩니다. 육군본부의 행정협정 해설서는 ‘본 협정의 정신에 위배

17) 자세한 내용은 <통일뉴스> 2013. 11. 20. “미국, 축적된 방위비분담금으로 3천억 넘게 이자소득”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008> 참조

18)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과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 안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하여야 하고 또한 본 협정의 정신에 위배되는 어떠한 활동, 특히 정치

되는 어떠한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의무'에는 영리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가 포함된다
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주둔 미군에 대한 특별한 면제와 제외는 공동방위라는 특수한
목적 아래 주어진 것이지 어떤 특정의 개인이나 군대 또는 국가에게 특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 제42조에 규정된 것 등에 비추어 보건대 주둔
미군 자체 및 그 구성원, 군속과 그 가족은 대한민국 내에서의 영리행위가 금지된다.
미합중국의 국가 자체의 영리행위가 금지됨은 물론이다.”¹⁹⁾

3) 이자소득의 주체는 커뮤니티 뱅크가 아니라 미국 정부

그런데 한미당국은 미국정부가 아니라 커뮤니티 뱅크가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합
니다. 그러나 평통사가 방위비분담협정과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
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확보한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의 자료에 따르면 “당 지
점은 커뮤니티 뱅크를 통하여 미국정부가 가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
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운용을 통해 미국정부
가 이자소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축적된
방위비분담금 운용의 주체이자 수혜자가 미국정부(주한미군)라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
에 이자소득의 주체도 미국정부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반면, 커뮤니티 뱅크는 미 국방부가 뱅크오브아메리카와 계약을 맺어 해외미군의 금
융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일 뿐, 이자소득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의 자료도 “커뮤니티 뱅크를 통하여 미국정부가 가득한 이자소득”이라고 밝
혀 이자소득을 얻은 주체는 미국정부이며 커뮤니티 뱅크는 이자소득의 중계자일 뿐임
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커뮤니티 뱅크가 이자소득을 얻었다는 주장은 제2의 거짓말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 시인 이후 정부관계자는 과거 서울지방국세청이 커뮤니티 뱅
크를 미 국방부 소속이라고 주장했던 것과는 상반되게 ‘미국 사기업’이라고 규정하고,
미국 정부는 “통상적인 은행의 영업 활동으로 미국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커뮤니티 뱅크의 한미SOFA상 법적 지위는 초청계약자입니다. “초청계약자는
미국법률에 따라 조직된 법인을 포함하여 미정부와 주한미군을 위한 조달계약을 체

적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의무를 진다”(한미소파 7조)

19) 육군본부, 『행정협정해설서』, 1988, 61쪽

결하고 동 계약의 이행만을 위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로서……공개경쟁입찰이 불가능한 경우에 미 본토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정부와 협의해 SOFA상 초청계약자로서 지정하게 된다.……이들은 주로 군사은행, 비행장 시설물관리, 학교, 음식물 조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노무조항 해설』, 노동부, 2001. 4, 10~11쪽) 즉, 커뮤니티 뱅크는 미국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계약의 이행만을 위해 주한미군을 위해 한국에서 일하는 군사은행인 것입니다.

한미당국이 커뮤니티 뱅크를 ‘사기업’이라거나 ‘통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 은행이 미국정부의 공적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감춤으로써 미국정부가 이자소득을 얻지 않았다는 억지 주장을 하려는 것입니다. 즉, 한국민 혈세로 미국정부가 이자소득을 얻은 사실이 밝혀지면 우리 국민의 반발이 커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커뮤니티 뱅크가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사실을 조작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한미양국 정부가 지난 7년 동안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해온 데 이어 미국정부가 이자소득을 얻지 않는다는 제2의 사기극을 벌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세금문제로 몰고 가는 것은 이자소득에 면죄부 주려는 것

뿐만 아니라 한미당국은 이 사안을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문제로 축소'왜곡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안이 미국정부나 커뮤니티 뱅크가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면 미국정부가 얻은 이자소득 자체가 합법화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과 전용이 정당화됩니다. 이 사안을 납세문제로 축소'왜곡하여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불법 축적과 이자소득에 면죄부를 주려는 기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2002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정부(주한미군사령부)가 방위비분담금을 매년 얼마씩 불법 축적했는지, ▲축적된 자금으로 매년 얼마의 이자소득을 올렸는지, ▲이자소득을 누가 최종적으로 수취했는지, ▲이자소득이 어디에 쓰였는지, ▲이런 불법행위를 비호하고 은폐한 책임자는 누구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5. 막대한 규모의 미집행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방위비분담금이 과다하게 책정된 결과입니다.

<표 3> 방위비분담금 합의/배정 및 집행 현황

(단위: 억원, 자료: 국방부)

연 도	협정 합의액	감액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09	7,600		7,600	8,420	7,273	1,128	19
2010	7,904		7,904	9,033	7,051	1,976	6
2011	8,125	△800	7,325	9,300	7,282	2,010	8
2012	8,361	△900	7,461	9,455	6,381	2,596	479
2013	8,695	△1,335	7,360				

<표 3>에 따르면 8차 방위비분담 협정 기간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감액분이 3035억원, 2012년도말 이월액이 2596억원, 불용액이 512억원입니다. 이 같이 미집행금이 거액으로 발생하는 것은 한미간 협상 때 방위비분담금을 매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책정한 결과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 8월 말 현재 (군사시설개선비) 집행률이 33.7%에 불과하여 1,500억원 이상의 이월이 예상”²⁰⁾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집행액의 과도한 발생에 대해 국회가 여러 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해왔지만 지켜지지 않아 국회의 예결산 심의권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1) 감액분은 8차 협정 종료 이후 지급 의무 없어

감액된 예산에 대해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회 답변(2013. 6. 14)에서 “우리 정부가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재정법 제3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 제1조는 “주한미군사는 분담금의 항목별 자금 배정액을 국방부에 통보한다”라고 되어있고, ‘이행약정’2조 나(군사건설비)는 “현물군사건설 개별사업은 한국과 협의 하에 주한미군사령관이 선정 및 승인”한다고 규정하여 군사건설사업의 수립이 주한미군사령관의 책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액 배정과 그로 인한 책임은 미측(주한미군사령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액된 방위비분담금을 협정 종료 이후에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8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8차

20)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Ⅱ』, 2013. 11, 346쪽.

협정에 따른 한국의 미군주둔비부담 의무도 종료됩니다.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르더라도 협정이 종료된 이후 감액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액분을 지급할 법적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2) 방위비분담금 이월은 국가재정법 위반

이월액과 관련하여 8차 특별협정(3조)과 그 부속합의서인 교환각서(8조)는 “만일 연도 말에 미집행 (군사건설)지원분이 발생하는 경우, 이 지원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정 제5조는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근거하여 합의된 절차를 거쳐 각 연도에 선정되었으나 협정 종료시 완전하게 이행되지 않은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사업을 계속 이행해 나가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협정 종료 이후에도 8차 협정에 따른 군사건설비의 계속 집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경우에만 이월을 허용하는 국가재정법을 위배하고 예산의 기본원칙인 단연도 예산주의를 무시한 초법적인 조치로 우리의 재정주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굴욕적인 협정입니다. 이월액이 매년 대규모로 발생하는 것은 군사건설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의 소요제기를 바탕으로 세워진 군사건설 계획 속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방만하고 과도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 불용액을 미측에 다시 제공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

불용액의 경우 국가재정법 상 국고귀속이 원칙이지만 방위비분담금 중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군사건설비의 경우 미군에게 다시 지불함으로써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6. 방위비분담금이 불법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미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에 발행한 「동맹국의 미군 지원비와 미국의 비용에 관한 조사 보고서」²¹⁾에서 한국 등의 군사 건설 프로젝트가 적절한 감독없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기여는 1천40만 달러(116억4280만원, 1달러당 1119원)에 달하는 평택

21) 「INQUIRY INTO U.S. COSTS AND ALLIED CONTRIBUTIONS TO SUPPORT THE U.S. MILITARY PRESENCE OVERSEAS」, 2013. 4. 15, p. 23~24.

캠프 험프리에 주둔하는 미2사단을 위한 박물관이나 140만 달러(15억6660만원)에 달하는 용산미군기지를 위한 식당시설과 같은 의심스러운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공돈(free money)”으로 간주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에 50억 원짜리 제과 제빵공장을 신축하려다가 미 의회의 제지로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이런 낭비적인 사업이 아닌 꼭 필요한 사업에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써야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한국이 지불하는 자금의 사용에 대해서조차 자국 납세자의 부담을 걱정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은 미국 돈이라며 우리 국민 혈세의 집행에 대해서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 간 군수분야 시행합의서’에 따라 한국 업체가 맡게 돼있는 군수지원 업무를 미국회사 ‘록히드 마틴’의 자회사 ‘PAE Korea’에 맡겨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06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긴 사례도 있습니다.²²⁾ 방위비분담금 중 인건비 11억 원을 영리 목적의 미군기지 내 드래곤힐 호텔 종업원 인건비로 불법적으로 돌려쓰다가 적발된 사실이 2008년 2월 ‘미국 국방부 감찰관 보고서’에서 확인된 바도 있습니다.²³⁾

뿐만 아니라 한국 국방부조차 2012년에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월액) 중 16억8백만 원을 남수단 파병비로 전용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²⁴⁾

이는 한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이 전혀 통제되지 않은 채 주한미군과 한국정부에 의해 제멋대로 흥청망청 쓰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7. 협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 것은 방위비분담금을 또다른 용도로 전용할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미군기지이전사업이 종료되는 2016년 이후에는 군사건설사업 소요가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으므로 우리나라로서는 협정기간이 짧아야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이 종료되는 (2016년)이후에도 기지이전 사업 우선 진행 필요성에 따라 미루어둔 오산, 대구, 군산 등 비이전기지 내에 군사건설사업 소요가 산적해 있다”(연합뉴스 2014. 1. 12)고 주장했고, 우리 정부도 이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군사건설비 누계 1조5727억원 중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을 위해 축적한 자금은 1조1193억원으로, 나머지 4534억원은 기존 미군기지에 투

22) 박기학, 우리 돈으로 선심쓰는 미군, 뽀뽀하다 [방위비분담금 무엇이 문제인가 ②] 방위비분담 왜 문제인가?, 오마이뉴스, 2013. 6. 19.

23)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영내 호텔 인건비로 사용”, 경향신문, 2011. 10. 11

24) “국방부, ‘남아도는’ 미군 방위비분담금 남수단 파병에 전용”, 민중의소리, 2013. 8. 19

입되었습니다. 2013년도 군사건설비 예산에도 오산, 포항, 군산기지의 건설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위비분담금 중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잔여사업으로 오산공군기지 제2활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위비분담협정 항목 중 하나인 ‘군수지원비’에도 기존 미군기지의 시설유지 및 개량을 위한 ‘시설유지비’가 포함되어 있고, 2012년의 경우 274억원의 시설유지비가 편성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러 항목으로 기존 미군기지 군사건설 관련 예산이 한국 정부 예산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미국은 더 많은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 협상 때마다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총액 중 군사건설비 비중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을 축적하기 직전 해인 2001년에 1041억원(21.3%)이었던 군사건설비는 2013년에 3850억원(44.3%)으로 늘었습니다. 액수로는 4배 가까이 늘었고, 비율로는 2배가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도 기존 주한미군기지에 군사건설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의 경우 경북 왜관의 캠프 캐롤에 4100만 달러, 대구의 캠프 헨리에 4800만 달러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²⁵⁾

이처럼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 비중이 대폭 늘어나고 한미당국의 예산이 여러 항목으로 투입되었는데 기존기지 군사건설사업 소요가 산적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약 협정기간 5년 동안 방위비분담금 전체 예산 중 군사건설비 배정이 2013년의 44.3% 정도의 비율로 이뤄진다면 2017년과 2018년의 군사건설비 합계는 9천억원에 육박합니다.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는 것보다 더 많은 막대한 자금이 기존기지 군사건설사업에 투입된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 협정기간 5년을 고집한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판단합니다. 즉, 원래 2016년으로 예정된 미군기지건설사업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미국은 자신들이 직접 부담하곤했던 8억8460달러(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 인준청문회 발언)마저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거나,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가 밝힌 대로 민간 투자 방식으로 건설되는 주한미군 가족주택 임대료나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 구축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군기지이전비용의 거의 대부분을 한국민 혈세로 충당하고 미국은 최첨단 주한미군기지를 사실상 거저 얻게 되는 것입니다.

25) 『H.R. 1540(112th):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2』, p. 403

<표 4> 9차 협정 기간 중 방위비분담금 총액 및 군사건설비 추정액

(단위 : 억원)

연도	방위비분담금 총액	군사건설비 추정액 (2012년과 2013년 군사건설비 비율 44.3% 적용)
2014년	9,200(한미 간 합의액)	4,076
2015년	9,320(2013년 물가상승률 1.3%, 확정액)	4,129
2016년	9,534(기재부 2014년 예상 물가상승률 2.3% ²⁶⁾ , 추정액)	4,224
2017년	9,791(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평균 2.7%, 추정액)	4,337
2018년	10,055(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평균 2.7%, 추정액)	4,454
계	47,900	21,220
평균	9,580	4,240

8. 국회는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거부하여 한미당국이 재협상에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과 그 운용에 대한 국회의 거듭되는 지적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9차 협정에서도 그 불법·부당성을 시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과 그 운용의 불법·부당성을 명명백백히 밝혀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을 부결시키고 한미당국이 재협상에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1)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해야 합니다.

미군주둔비부담금이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불법 전용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한미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군주둔비부담금 미집행액이 1조3523억원(2013년 3월말 현재 주한미군의 군사건설비 축적금 7380억원, 협정액과 편성액 차액 합계 3035억원, 2012년도 분 이월액 2596억원, 불용액 합계 512억원)에 이르고, 미군축적금 투자 이자소득 최소 추정치 3천억원까지 합치면 1조6천억원을 넘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은 대폭 삭감해야 했습니다. 정부도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군사건설비를 삭감

26) “올 소비자물가 2.3% 상승 전망”(뉴시스 2014. 1. 9)

할 이유가 생겼다면 방위비분담 총액을 감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새누리당도 지난해 7월 외교부와 협의 후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총액 기준으로 감액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14년도 국방예산 증가율 4.2%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로(5.8%)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013년 방위비분담금 예산편성액 7360억원에 비해 무려 25%가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정부 주장대로 8차 협정 기간 중 협정액과 편성액의 차액(3035억원)까지 부담한다면 매년 평균 600여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은 앞으로 5년간 연평균 1조원 이상의 방위비분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 핵위협 증대에 따른 주한미군대비 태세 강화’나 ‘미 국방예산 자동삭감’ 등을 들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압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북한 핵위협’은 본질적으로 남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 핵공격위협에 대응한 것이고, 미 국방예산 삭감문제 또한 과도한 전쟁비용 지출 등 미국의 정책실패에서 비롯된 문제로서 한국의 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용을 부담할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조차도 B2와 B52 폭격기, 핵잠수함 등의 한반도 파견은 주둔비용과 개념적으로 다르며 주둔비용 결정의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대폭 증액이 이뤄진 것은 미국의 압력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최근 급박해진 안보상황을 감안해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한국일보 2014. 1. 13)는 외교당국자의 설명은 이를 방증합니다.

따라서 국회는 한미당국이 재협상을 통해 아무런 타당한 근거도 없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 대폭 증액된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하도록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를 거부해야 합니다.

2)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금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우리측 황준국 협상대표는 군사건설비의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의 전용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기자들에게 직접 설명한 바 있습니다.(2013년 8월 18일 외교부 기자회견)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완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5년 간 2조원 안팎의 우리 국민 혈세가 또다시 미군기지이전비용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사건설비는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의 원천이고, 불법 부당하고 방만한 예산 집행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액 편성과 고질적인 이월을 야기하여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위비분담금 중 가장 심각한 문제를 낳

고 있는 군사건설비 항목을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입니다. 군사건설비 항목을 폐지하더라도 방위비분담금 중 군수지원비의 한 항목으로 기존기지의 시설유지 및 개량을 위한 ‘시설유지비’가 설정되어 있고, 연합방위력증강사업으로 기존기지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 자체 예산에도 기존 미군기지 군사건설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기지 시설 개량과 건설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회는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를 거부하여 한미당국이 재협상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주한미군 가족주택 임대료 등으로 전용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노회찬 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2005년,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으로 가족주택 임대료를 내겠다는 미국의 요구에 동의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노 전의원은 “한미당국이 ‘가족주택은 임대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만 공개하고 임대료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지불한다는 것은 방위비분담금이 국민 관심사가 되고 정치쟁점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합의의사록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문서 교환으로 처리하기로 했다”²⁷⁾고 폭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는 2007년 4월 2일 본국에 보낸 3급비밀 전문에서 “한국의 (미군기지이전비용) 부담분은 전체 비용의 93%”라고 추산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이 차이는 한국의 계산 방식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주는) 방위비분담금 전용분과 민자투자(BTL, 한국의 민간 업자가 건물을 지어준 뒤 일정 기간 임대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²⁸⁾ 버시바우 대사가 민간투자 부분을 한국 부담으로 판단한 것은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가족주택 임대료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제4조 1항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용산기지 안에 있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소요 주택을 미국의 비용으로 임차 또는 리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²⁹⁾ 또, 미2사단 가족주택 임대료는 우리가 부담해야 할 어떤 의무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부담해야 합니다.

27) 연합뉴스, 문화일보 2005. 5. 26

28) 프레시안 2011. 9. 28.

29)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제4조 1항. “.....양당사국은 위 소요시설 중 군인가족용 주택이 합의된 장소에 다음의 방식으로 공급되도록 주선하기로 합의한다. 가. 대한민국은 합중국 국방부가 용산기지 안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대체주택을 제공할 것이다. 나. 합중국은 그 밖의 모든 소요 주택을 합중국의 비용으로 임차 또는 리스할 것이다.....”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이행약정에도 주한미군 가족주택 임대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³⁰⁾

9차 협정에 따른 방위비분담금이 한국 부담분 약 5천억원과는 별도로 미국이 부담해야 할 수천억원 규모의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 구축에 쓰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국방부는 진성준 의원에 대한 대면 보고 때, 미측이 보유한 현금 미집행액은 “LPP사업, **특수정보시설**, 설계비, 기타 건설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³¹⁾ 이는 미국이 부담해야 할 LPP사업과 마찬가지로 특수정보시설 즉 C4I시설 등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향후 제공되는 방위비분담금에서도 특수정보시설(C4I) 비용을 충당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제5조 3항에는 C4I 이전과 관련하여 기반시설 제공, 기존 장비 이전, 900만불 이내의 장비 교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사와 한미연합사 C4I의 한미 공동 성능향상 및 개발계획은 용산기지이전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주한미군사를 위한 C4I 성능향상 또는 개선을 위한 자금은 합중국이 조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³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대한 규모의 C4I 비용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방위비분담금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할 C4I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이처럼 주한미군 가족주택 임대료나 C4I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위반이므로 이들 용도로의 전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거부해야 합니다.

4) 감액분을 지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8차 협정 기간 중 협정액과 예산편성액의 차액(감액분)이 발생한 것은 미국이 정상적

30)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이행약정 2항 다. 군수비용 분담. “군수비용 분담은 현물로 지급된다. 한국 국방부는 군수비용 분담 프로그램에 의거 군수장비, 보급품 및 용역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은 탄약의 저장 및 정비, 수송, 장비의 수리 및 정비, 철도차량을 포함한 비전술차량, **가족주택을 제외한 합의된 특정 임대료**, 주한미군시설의 유지비용과 같은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31) 진성준 의원, <방위비분담금, 국회통제 강화방안>, 2013. 10. 22쪽

32)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제5조. “3. 양당사국은 이전과 관련된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에 관한 사항을 다음의 방식으로 처리한다.

가. 대한민국은 시설종합계획에 따라 새로운 시설에서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의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의 기존 장비를 이전한다. 특정 장비가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이전이 교체보다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장비는 교체될 것이다. 장비의 교체를 위한 대한민국의 부담은 미화 9백만불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유엔사 및 연합사를 위하여 현재 기획·계획된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의 한·미 공동 성능향상·개발계획은 용산기지 이전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 주한미군사를 위한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의 성능향상 또는 개선을 위한 자금은 합중국이 조달한다.”

집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미측의 책임입니다.

감액분 지급은 국가재정법 상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8차 협정의 유효기간이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감액분을 모두 지급하게 되면 우리는 9차 협정에 따른 방위비분담금뿐만 아니라 향후 5년 동안 매년 평균 6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여 연평균 1조원 이상을 미측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는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거부함으로써 정부가 이에 대해 미측과 다시 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LPP 전용을 위해 축적된 방위비분담금과 이자소득을 환수하거나 9차 협정에 우선 반영해야 합니다.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부당한 운용과정에서 감액분 외에도 2012년도분 이월액 2596억원, 8차 협정 기간 중 불용액 합계 512억원, 이자소득 추정액 3천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회는 2014년 예산안 심사 때 “정부는 제9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내용에 분담금 미사용액의 우선집행 및 차년도 예산편성시 미사용액을 공제하는 방안이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이 같은 국회의 합리적 요구를 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협정안에 대한 비준동의를 부결시킴으로써 정부가 이 자금을 환수하거나 협정에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미측과 다시 협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6) 협정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협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합의한 것은 미측의 방위비분담금 전용 등의 전횡을 계속 허용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과 재정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정기간을 1년으로 다시 할 수 있도록 국회는 협정안에 대한 비준동의를 거부해야 합니다.

9. 한미SOFA에 위배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조속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1) 우리는 미국의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50% 부담 요구를 초과하여 이미 65%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³³⁾

미국은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NPSC) 개념에 의거하여 한국의 부담이 42% 또는 40~45%에 불과하여 불공평하다면서 한국에 대해 50:50 부담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부담에 대한 미국의 주장은 미군주둔비부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직·간접지원비는 사실상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부당합니다.

한미당국의 통계에 따르더라도 우리는 이미 NPSC의 65.1%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평가·누락분까지 따지면 한국의 비인적 주둔비부담 비율은 최소 70%를 넘습니다.

<표 5>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한·미 간 부담 비율(2010년 기준)

	계	내역	출처
미국 정부 부담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7억7330만달러 (34.9%) (8939억원)	-운영유지비:6억4680만달러 -가족주택운영비:3930만달러 -가족주택건설비:440만달러 -군사건설비:8280만달러	미 국방예산 2012회계연도 운영유지비 총 람(2011. 2.) ³⁴⁾
한국 정부 부담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	14억4489만달러 (65.1%) (1조6749억원)	-직접지원비:8561억원 (미군주둔비부담금 7904억원 등) -간접지원비:8188억원 (토지임대료 평가 5648억원 등)	한국 국방부의 국회 보고자료 (박주선의원실 제공)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총계	22억1819만달러 (100%) (2조5688억원)		
비고	국 가 통 계 포 털 2010년 평균환율 1달러당 1156원		

2) 방위비분담금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1991~2013년 사이에 우리 국방비는 7조4524억원에서 34조6351억원(일반회계)으로

33) 자세한 내용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국의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50% 부담’ 요구의 허구성”, 2013. 6. 19. 참조. http://www.spark946.org/renew/prog/bbs/board.php?bo_table=open_content&wr_id=44

34) 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OF DEFENSE (COMPTROLLER), 『OPERATION AND MAINTENANCE OVERVIEW FISCAL YEAR 2012 BUDGET ESTIMATES』, February 2011, p.208.

4.6배 늘어난데 비해 방위비분담금은 1073억원에서 8695억원으로 8.1배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위비분담금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에서 2.5%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주둔비 부담이 국방비 증액을 이끈 주요 요인의 하나임을 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미당국이 축적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 잔액이 1조3천억원이 넘고, 미군이 축적한 자금에서 나오는 이자소득도 3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방위비분담금이 남아도는데도 우리는 향후 5년간에 걸쳐 5조원에 가까운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지급해야 합니다.

3) 방위비분담금은 자주적 방위력 건설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위비분담금만 하더라도 1991년부터 2011년까지 22년간 무려 10조4184억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의 장비가치 92억 달러³⁵⁾(10조1936억 원, 2011년 평균환율 적용)를 넘는 금액입니다.(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한미군에 대해 방위비분담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직간접지원(미군기지 무상 임대, 카투사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방위비분담금을 한국군 전력강화에 투자했다면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것에 상응하는 장비를 우리가 모두 갖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방위비분담금은 자주적 방위력을 갉아먹은 반면, 한국 국방의 미국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4) 방위비분담 협정 자체가 SOFA에 위배되는 불법입니다.

한미SOFA 제5조는 한국이 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2항)하는 대신, 미국은 모든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1항)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비용을 주둔국(한국)과 파견국(미국)이 나눔으로써 부담의 균형을 기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주한미군 감축 압력³⁶⁾ 등으로 한미SOFA 제5조 1항을 정지시키고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의 일부를 부담토록 한 ‘특별조치’ 협정입니다. 그러나 8차 특별협정 전문을 보면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하고 상호적인 의지라는 목표를 인식하면서”라는 매우 추상적이고 일반론적인 언급이 있을 뿐입니다. 방위비분담

35) 권헌철, “주한미군의 가치 추정 :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체비용 추정”, 『국방연구』 제54권 제2호(2011년 8월)

36) “당시 한국의 협상 실무진의 증언과 관련 문건을 종합해 보면 한국이 결국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원을 개시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주한미군 감축압력이었다.”(남창희, “일본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 정책체계의 연구 : 현지 고용원 인건비 지원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6권 제2호, 2002.12, 91쪽)

특별협정은 한미소파5조의 효력을 정지시킬 정도의 특별한 조치가 인정될 수 있는 충분한 사유 또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미국의 강압에 의해 ‘시설과 구역’ 제공 이외에 미군의 주둔경비에 대해서도 한국이 상당부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한미소파 5조의 취지에 역행하여 한국(주둔국)의 부담을 더욱 늘리는 불법적이고 불평등한 협정입니다.

5) 신속기동군으로 바뀐 주한미군을 위해 시설과 구역 무상제공뿐만 아니라 주둔 경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천만부당합니다.

우리가 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침략을 막아준다는 명분 때문(한미상호방위조약)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주한미군은 더 이상 대북 방어 임무만 담당하는 불박이 군대가 아니라 이라크 등 분쟁지역에 파견되는 신속기동군(‘전략적 유연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이 대북 방어 임무에 더 이상 얼마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한미당국이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북 방어 임무, 즉 한미상호방위조약 상의 임무를 벗어난 주한미군을 위해 기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6)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폐기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불법적이고 부당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강요에 따라 한미SOFA를 정지시키고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협정으로 시작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조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보장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는 협정을 종료시켜야 합니다.

10. 청문회를 통해 밝혀야 할 사항

- 방위비분담금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과 축적의 적법성 여부
- 2002년 이후 연도별 방위비분담금 축적액과 축적금 총액
- 방위비분담금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 양해의 법적 근거

- 미군기지이전비용 총액과 한미 간 분담 내역
- 방위비분담금 축적금 운용을 통한 연도별 이자소득 액수
- 방위비분담금 축적금 운용을 통한 이자소득의 최종 귀속처와 사용처
-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합의 규모의 적정성
- 방위비분담 협정액과 예산편성액의 차액(감액분) 지급의 법적 근거
- 계속되는 대규모 이월의 적법성 여부
-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서 합의한 ‘제도개선’의 유효성 여부
- 미군기지이전사업 진행률과 완료 시점
- 방위비분담금을 통한 미군기지 가족주택 임대료 지불 여부
- 방위비분담금을 통한 미측의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 비용 부담 여부
-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계속 유지의 적정성 여부
-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재협상 필요성 여부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문규현			평통사 상임대표
2	고영대			평통사 공동대표
3	문홍주			평통사 공동대표
4	변연식			평통사 공동대표
5	서창호			평통사 공동대표
6	이일영			평통사 공동대표
7	임종철			평통사 공동대표
8	오미정			평통사 사무처장
9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 팀장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정청래		민주당	외교통일위	서울마포구을	대표소 개의원
2	심재권		민주당	외교통일위	서울강동을	
3	우상호		민주당	외교통일위	서울서대문갑	
4	원혜영		민주당	외교통일위	경기부천오정	
5	인재근		민주당	외교통일위	서울도봉갑	
6	박주선		무소속	외교통일위	광주동구	
7	안규백		민주당	국방위	서울동대문갑	
8	진성준		민주당	국방위	비례대표	
9	김광진		민주당	국방위	비례대표	
10	오병윤		통합진보당	국토교통위	광주서구을	